

에이즈 관리, 민간과 공공부문의 분명한 역할 분담



이주열 남서울대학
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지난 1월에 발표된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333명의 감염자가 추가되어 2001년 12월 현재 총 감염자는 1,6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에이즈에 관한 통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에이즈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매번 발표되는 자료에는 감염인의 증가 추세가 높아지고 감염경로가 다양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 원인도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도 치밀하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에이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분명한 에이즈 정책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과 치료 및 감염인 지원사업 등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법 제도를 개선하여 예방 및 관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특수 접대부, 유흥업 종사자, 동성애자, 외국인 등에 대한 에이즈 예방활동은 민간단체의 홍보활동만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민간단체의 역할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부산 교도소에서 발생한 무기수의 에이즈 고

의감염 사건은 정부의 에이즈 사업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수감중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규정은 격리수용, 보안유지 등의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 있어 허술하게 다루어진 수밖에 없다.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엄격히 비밀에 부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규정뿐만 아니라 관리규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에이즈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방면으로 폭 넓게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이즈

060-700-6191(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은 060없이 사용 가능)

<http://www.aids.or.kr>

kada@aids.or.kr

(02)675-8060(서울),
(051)621-0777(부산)
(02)675-4114(서울),
(051)621-0444(부산)

